+

선거법 재판 지연·검수완박 위반…어떤 답변 나올까

오는 21일 광주법원·검찰국정감사

안도걸·정준호 의원 아직도 1심 중 수사 검사가 기소 '공소 기각' 망신살 내년 개원 회생법원 상황도 관심사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법원・ 검찰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각 현안에 대해 어떤 답변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법원 국감에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사범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4·10 총선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 상실' 기로에 선 광주·전남 주요 선거 사범은 정준호(광주 북구갑) · 안도걸 (광주 동남을)·신정훈(나주·화순)·김문수(순 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 등 4명이었다.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경우 본인이 기 소된 건 아니지만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

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위기를 맞았으나, 올해 2 월 1심에서 선고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 정돼 가장 빨리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반면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4·10 총선으로부 터 1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상 강행 규정인 '6·3·3 선고'에 위배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 이 중 신정훈·김문수 의원은 지난 7-9월 각각 한 강행규정)에선 1심 선고를 기소로부터 6개월 이내로 두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10월2 일 공소장이 접수된 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 4월에 나왔어야 했다.

안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재기 소'된정의원은 17일에 열릴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24일 지역 선거 사범 중 가장 먼저 기소됐으나 갈 길은 가장 멀다. 이는 광주지검에서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등 검 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 기각 이란 뼈아픈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이 재기소함에 따라 재판은 다시 진 행 중이나, 정 의원 측에서 이중 처벌 금지 원칙 위배와 공소시효 만료 주장을 펼치고 있어 절차 적 흠결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또 정 의원 측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중지돼 장기화 는 불가피함 전망이다.

오는 2026년 3월 개원 예정인 '광주회생법원' 도 주요 현안이라 준비 과정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단장으로 한 준비 단은 앞서 개원 로드맵과 사무실 공간 재배치 관 련계획을 수립했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구체적인 공간 재배치 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 았지만, 광주지법 본관과 2023년 12월 준공한 별관 일부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영기자



'정신과 꽃가게' 세계정신건강의 날(10월10일)을 기념해 16일 광주 남구청 1층에서 정신건강 관련 팝업스토어 '정신과 꽃가게'가 열려 시민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 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광주·전남 '캄보디아 실종' 2명 신변 확인

각 1명씩…북부 20대·여수 30대 광주청 현지 소재 탐문 전단 제작

광주·전남 지역 '캄보디아 실종' 추정자 중 2 명의 신변이 확인됐다.

1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A (20대)씨는자신의부모와 SNS를 통해 전화했다. 올해 4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는 8월부터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전날 통화 당시 A씨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 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머물고 있는 장소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진

상태였다.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경찰 역시 A씨와 직접 통화하며 신변에 문제가 없다는 건확인했다.

다만, 목소리로만 확인한 만큼 A씨에게 현지 대사관에 직접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대시관을 통해 A씨의 신변이 확보되 더라도 행적 확인과 함께 현지 범죄 집단 피해. 연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여수경찰도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로 돈을 벌 러 가겠다며 출국한 B(30대)씨의 안전을 확인 했다. B씨는 태국으로 출국한 후 올해 6월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나 여수경찰은 그 의 지인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접촉했고 연락이

닿았다.

그는 가족과도 영상 통화를 하면서 신변에 이 상이 없음을 알렸지만, 현재 무슨 일을 하는 지 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실종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총력 대응에

경찰은 국내 체류 중인 캄보디아인을 대상으 로 현지 가족과 지인 등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소재 탐문을 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어로 번역한 전단지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캄보디아로 떠난 가족의 연락 두절 신 고는 이날까지 광주 5건·전남 3건 등 총 8건이 /안재영기자

장석웅 前 도교육감 항소심 내달 13일 선고

지난 8회 지선 당시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땐 피선거권 박탈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 선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항소심이다음 달마무리된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장 전 교육감 등의 결 심 공판을 열었다.

1심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와 홍보컨설턴트 B씨에게 각각 400만·3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주 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교육감과 A씨는 B씨에게 선거 컨설팅

등 명목으로 6천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일부를 지급했다.

이를 받은 B씨는 2022년 5월19-31일 장 전 교 육감의 선거사무소에 거의 매일 출근해 선거 관 련 업무를 진행했다.

문제는 컨설팅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공 식 선거운동비용으로 회계 처리 되지 않은 점

1심 재판부는 C씨의 업무 성격을 봤을 때 컨설팅 수당이 선거운동비용에 포함돼야 한 다고 보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

이날 장전 교육감 측은 1심 판결확정 시보전 받았던 선거 비용 십수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과 공직선거법처럼 피선거권 박탈 문제가 있 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 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이뤄진다. /안재영기자

어머니와 싸운 이웃 '상해치사' 10대 실형

단기 1년·장기 2년…법정구속도

어머니와 다투던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 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 사1부(정현기부장판사)는이날상해치사혐의 로 기소된 A (16) 군에게 단기 1년·장기 2년을 선 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군의 어머니 B씨 에겐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A군은 지난해 10월13일 오후 5시40분께 무안 군 현경면에서 이웃 C(70대)씨를 수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당한 후 C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 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A군은 어머니와 (씨가 다투는 걸 보고 선 순간 화가 나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C씨의 말다툼 이 잦아들었음에도 안면부를 2차례 가격했다. 이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아 직 나이가 어린 점,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 작한다"고양형사유를 밝혔다. /안재영기자



+